



네이버·카카오, 이젠 ‘1도 1사’로 지역언론 갈라치나

포털 뉴스에서 지역언론을 차별하던 ‘포털권력’ 네이버·카카오가 이번엔 ‘특별심사’로 지역언론을 줄 세우려 한다. 포털뉴스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뉴스콘텐츠제휴(CP) 입점을 결정할 “지역매체 특별심사”에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1개 사를 입점시키겠다는 거다. ‘1도(道)에 1사(社) 소주’만을 팔게 한 군사독재 시절이 새삼 떠오른다.

말이 심사이지 9개 ‘특설 링’을 깔아줄 테니 지역언론끼리 치고받고 싸우란 거다. 이대로라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은 왜 싸우는지도, 룰도 제대로 모르는 채 ‘1도 1사 자리’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조짐이다.

9개 권역이란 기준도 납득이 안 되지만, 이번에도 포털은 밀실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이름으로 ‘치졸한 갈라치기 정책’을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여론 수렴 등 공론화는 일절 없었다. 코로나19로 포털권력에 대한 감시의 눈이 느슨한 틈에 포털은 이런 압착한 짓을 궁리했다니 그 저 헛웃음만 난다.

그간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지역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은 지역민의 알권리 해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공공재인 지역언론에 대한 포털의 차별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제평위에 지역 언론사의 선정기준을 제시했고, 신문법 개정을 통한 위치기반(IP) 지역언론 우선 노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목소리에 포털은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포털에 묻는다.

9개 권역으로 쪼갠 근거가 무엇인가. 인천·경기,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등 9개 권역은 해당 지역민들조차 수궁할 수 없는 해괴한 분할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지상파 방송사도 복수로 존재하며 전혀 다른 생활권과 지자체들로 나뉜다. 인천과 경기는 또 어떠한가. 서울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두 지역을 한곳으로 묶었다. 9개 권역을 CP 제휴가 가능한 언론사 수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로 나눈 건 아닌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은 관련 지원법도 엄연히 다른데 포털은 이중격투기라도 하라는 얘기인가.

포털은 밝혀라.

지역언론사 심사기준은 기존 제휴사 심사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자체 기사 30% 중 지역 자체 기사 80%”라고 알려진 기준만으로는 지역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사와 지자체 홍보지로 전략한 언론사를 구분할 수 없다. 지역 저널리즘 평가에서는 지역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앙지’에 대한 정량평가가 지역언론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지역 독자·주민

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어떻게 지역언론사를 평가할 수 있는가.

포털은 답하라.

지역언론과 포털의 CP 제휴 근본 목적은 지역 저널리즘에 대한 지원이지 시혜가 아니다. 포털 중심의 뉴스소비 환경은 지역언론 쇠퇴와 소수 중앙언론 집중을 낳았다. 수만 부를 넘기기 어려운 지역신문의 독자 감소,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사주의 투자 미흡, 코로나19로 인한 생존 위기까지. 포털이 디지털뉴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이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글로벌 기업 구글조차 지역언론 ‘지원’에 나선 마당에, 제평위는 언제 다시 할지도 모를 ‘특별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수익 경쟁과 자사 이기주의만을 부추길 뿐이다. 양대 포털은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거나 국회가 논의하는 ‘기금’에 답해야 한다.

제평위에 제안한다.

지역언론 심사기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공개 토론회를 열자. 현재 제평위원 30명 중에 지역과 지역언론에 대해 정통한 인사는 극소수다. 지극히 ‘서울공화국’ 중심의 관점과 ‘양적평가’만으로 지역 저널리즘에 잣대를 댈 수는 없다.

5월 제평위 전체회의에 앞서 ‘지역언론과 포털의 상생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자. 이 자리에서 9개 권역 획정 해명, 지역민이 바라는 디지털 지역언론의 역할, 지역언론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디지털 역량을 고민하자.

못 박는다.

언론노조는 포털이 이 같은 상식적인 질문에 명확한 설명 없이 특별심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실제 불분명한 ‘언론개혁’을 외치는 정부 여당과 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등 사용자단체들은 포털의 특별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언제까지 제 잇속만 차리며 주판만 튕길 것인가. 포털의 지역차별에 맞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2021년 5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